



Online Series

2015. 5. 15. | CO 15-11

김정은식 공포정치 하의 북한: 안정화 마무리를 위한 극약처방인가, 불안정 시작의 서곡인가?

차두현(통일정책연구실 객원연구위원)

북한 인민무력부장 현영철(대장)이 지난 4월 30일에 숙청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과 권력 안정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 북한 군부 내에서 어쨌든 명목상으로라도 서열 2위를 차지하는 인물을 젊은 수령의 결정 하나로 전격적으로 숙청한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보당국의 첩보를 전제로 할 때 재판도 없이 그것도 ‘고사총’이라는 대물(對物) 살상용 무기를 통한 공개처형이라는 방식도 엽기적(獵奇的)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영철 처형 이전에도 김정은이 금년에 들어서만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등 당·정·군의 주요 엘리트들을 대거 숙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잔인한 대규모의 숙청이 그의 통치력의 한계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포정치, 초조함의 산물?

프랑스 대혁명 이후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에 의해 1793~94년간 자행 되었던 이른바 ‘Reign of Terror’ 시대는 아마 ‘공포정치’의 대명사 격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물리적 폭력을 통해 반대파를 탄압하고 일반 국민들 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행태도 그렇지만, 당시 새로이 고안된 기요틴 (guillotine, 단두대)을

통한 참수(斬首)형의 처형방식 역시 상당한 정신적 위축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공포정치’는 정치가 등장한 이후 독재적인 위정자들에게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쓰여 왔다. 고대 중국 은(殷)의 폭군 주왕(紂王)이나 진(秦)의 시황제 정(政)의 학정(虐政), 비밀경찰과 돌격대(SA)를 이용한 아돌프 히틀러의 대민 억압, 그리고 우간다의 이디 아민(Idi Amin)이나 장 베델 보카사(Jean-Bédel Bokassa)의 집단 학살을 통한 공포 조장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포정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공포정치’는 구(舊)소련의 스탈린이나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역시 활용했던 기법이며, 그 당시의 기준에서 잔인함이나 혐기성 측면에서 김정은에 결코 못지않았다.

문제는 각종 역사적인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결국 공포정치가 권력기반의 약화를 가져와 독재자의 몰락을 부르는 전주곡이 된 예도 많지만, 그 권력의 지속성이 꽤 길었던 인물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공포정치가 시행되는 원인과 맥락이 사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공포정치는 심리적 공포와 위축감을 조장함으로써 잠재적 반대세력을 억누르는 한편 밑으로부터의 순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를 추진하는 동기 면에서는 다양한 차이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포정치의 동기는 정통성의 부족에서 오는 것일 경우도 있고, 통치력의 한계에 직면한 지도자의 자포자기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 잘 짜인 권력 안정화의 각본에 의거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공포정치를 시행하면서 정권의 업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에 대항하는 잠재적 반대세력의 조직화 정도는 어떠한가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북한 정권의 잠재적 불안정성과 연결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가 공포정치를 추진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추론해 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여러 분석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결국 통치력의 한계에 직면한 젊은 수령의 자포자기적인 선택일 수도 있으며, 이것이 현실일 경우 일부의 첩보대로 북한 권력 엘리트들이 그의 능력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이 전제가 성립할 수 있으려면 김정은 시대 출범 이후 북한 정권이 보이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업적이 그 이전에 비해 심각하게 빈약하다는 반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현 단계

에서는 이를 뚜렷이 입증할 만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지도 않다¹⁾. 정통성의 부족을 폭력과 공포로 보장한다는 가설 역시 주체사상에 입각한 ‘수령제’와 ‘혁명가계론’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서는 설득력이 여전히 약한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 이전에도 존재했던 공포정치, 그 목적은 압축적 안정성 확보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정치적 불안의 산물로만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 이러한 공포정치가 그 엽기성의 면에서 다소 차이가 날 뿐 선대(先代)에서부터 이미 존재해 왔다는 점이다. 김정일 시대였던 1997년, 북한은 당시 농업담당비서였던 서관희를 공개처형한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해에 이르기까지 고위급 50여 명을 공개처형 한 바 있다.²⁾ 일부에서는 1997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2,000여 명 이상의 중앙당 중견급 간부들이 숙청되었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한다. 묘한 것은 1997년이 김정일이 김일성의 3년상 직후 ‘선군정치’를 필두로 한 자신의 통치 스타일을 확립하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김정일 시대의 간부들에 대한 공포정치는 2000년대 초·중반 이후 다소 진정되었다. 이러한 맥락은 김정일의 3년상을 2014년 말에 마치고, 2015년 육성 신년사를 통해 자기의 정치적 색채를 정립하겠다는 점을 암시한 김정은의 여건과 매우 유사한 속성을 띠는 것이다.

물론, 북한 내에서 잠재적 정적(政敵)의 처리나 숙청 방식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김일성 시대의 주요 엘리트들에 대한 숙청은 비록 한참 뒤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정치적 복귀의 여지를 남기고 진행되었다. 전(前)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이나 현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용무가 숙청 후 10여 년이 지난 후 권력일선에 복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면, 김정일 시대의 숙청은 곧 정치일선에서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는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숙청의 방식이 훨씬 잔인하고 엽기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경험한 권력기반 형성의 과정, 지지기반, 그리고 카리스마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즉, 잠재적 반대세력을 압도하고 대중을 휘어잡는 능력 면에서 김정은은 분명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비해 약한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정적이 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해 그 이전보다

1) 오히려 경제면에서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미세하나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가들도 적지 않다.

2) 이는 당시 국내언론에도 그대로 보도되었다.

훨씬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도 기관총 처형설 등 차마 상상하기 힘든 수단이 동원되었다는 설이 도는 것도 이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동기를 ‘불안감’만으로 단정하기에는 여전히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당·정·군을 망라하여 숙청이 지속되어 왔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비중을 지닌 인물들을 중심으로 관찰할 때, 장성택³⁾을 제외하면 김정은 시대 동안 부침이 가장 큰 인물들은 군부의 최고위 장교단이었다. 김정일 사망 이후의 후견 3인방 중 가장 먼저 숙청된 리영호, 최근 사망이 발표된 전 인민군 총참모장 김격식,⁴⁾ 이번에 처형된 현영철 이외에도 잦은 군 인사 교체, 계급 강등과 복귀를 반복하고 있는 김영철, 리영길 등의 군 핵심간부들의 사례에 비추보면 현재의 김정은식 공포정치는 그 칼끝이 주로 군부를 겨누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숙청된 주요 인물들 중에도 군부 고위 장성급이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즉, 현재의 ‘공포정치’는 ‘선군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⁵⁾ 자신의 시대를 확립하려는 김정은의 의도적 수순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당·정·군에 잔존하고 있는 장성택, 리영호 등의 과벌을 색출·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공포정치는 김정은에게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고려요소도 있다. 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해 ‘후대사랑’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내에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을 지지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60대 이상의 원로세대들에 대한 집중적 숙청은 세대교체 과정에서 등장한 극약처방의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 안정성과 중 장기적 불안정성의 혼재, 끝나지 않은 김정은의 딜레마

이러한 점에서 김정은식 공포정치가 자기 시대를 성공적으로 공식 개막하기 위한 김정은의 마지막 극약처방인지, 더 이상 방어하기 힘든 체제불안을 깨달은 독재자의 단말마적인 선택인지는 향후 1~2년이 더 경과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최소한 단기적인 측면에서 공포정치를 선택한 김정은 체제는 불안정성보다는 안정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고위층의 권력 엘리트를 젊은 ‘수령’의 말 한 마디로

3) 그도 민간인이지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4) 지병에 의한 사망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5) 이는 이미 금년도 신년사에서도 암시된 바 있다.

처형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그를 정점으로 한 권력구도의 일사불란한 위계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앞에서 지적한 북한 통치 이데올로기의 속성상 정통성 면에서 그를 대체할 인물 역시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공포정치와 2인자 그룹에 대한 집중적 견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권력 안정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이다. 과거 김일성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최용건, 최현, 김일, 최광 등 자신의 빨치산 동료 그룹 내의 2인자들을 상호 경쟁하게 만듦으로써 수령제 통치기반을 보강하고자 했고, 이러한 2인자 그룹은 김정일로의 권력 계승이 진행되면서 오진우, 오극열, 연형묵 등으로 바뀌어갔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 역시 리제강, 장성택, 김광진, 김영춘 등 당·정·군의 인사들에 대한 분할통치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으며, 특히 ‘선군정치’ 이후에는 군부 인사들을 상호 경쟁시켰다. 남북한 관계의 특정 국면에서 북한의 대남태도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온책이 불규칙적으로 교차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인 시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북한 내부에서는 분할통치에 의한 부처 간 실적 경쟁이 작동된 흔적이 나타난다.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김일성의 수령독재가 정점에 달했던 1970년대 북한에 있어 ‘2인자’는 그냥 명목상의 지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2인자가 일정 부분 이상의 실권을 지니는 인물로 부각된 것은 김정일 이후였으며, 그 지위는 오진우에서 조명록, 그리고 장성택 등으로 변화하였다. 즉, 1인 독재가 완전히 정착된 시기의 2인자는 그저 ‘수령’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 아래 단계에 위치하는 2인자 그룹의 수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독재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이다.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독재자의 권력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의미한다. 2인자 그룹을 설정해 놓고도 그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조바심을 내며, 끊임없이 의심하는 독재자는 잦은 숙청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한다. 그런데, 이렇게 2인자 그룹을 지나치게 선불리 정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기 권력의 방과제를 해제하는 격이 된다.⁶⁾ 김정일 사후 자신을 지탱하던 2인자 그룹의 세 선두주자 리영호(군), 장성택(당), 최룡해(당·군)를 차례로 처형하거나 약화시킨 김정일의 행보는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다. ‘분할통치’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며, 잘못 구사하다가는 오히려 독재자와 2인자 그룹의 동반 몰락을 가져온다.

6) 아무리 독재체제라고 해도 2인자는 그냥 지명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행정능력과 인적 네트워크, 정국장악력이 있어야 한다

장정남, 황병서, 조연준 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2인자 그룹의 무게감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볍다는 것이 김정은의 딜레마이며, 이것이 최용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불안은 2015년 중에도 계속될 것이며, 2인자 그룹 내의 인물 간 서열 변동은 앞으로도 자주 일어날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한 소식통은 ‘포스트-장성택’으로 불릴 만한 인물의 부재로 인해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이 위축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물론, 최근 북한의 경제추세를 볼 때 완전히 신뢰할 만한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성택 정도의 대외 네트워크, 행정능력, 당·정·군에 대한 고른 영향력을 보유한 인물을 김정은이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딜레마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권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포스트-장성택’의 인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 반면, 그러한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권운영의 부담을 고스란히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 과연 김정은이 이 이율배반적인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가 의문인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공포정치와 결합되어 더욱 가중된다. 공포정치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잠재적 반대세력을 견제하고 순치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모든 엘리트들을 무사안일 혹은 복지부동의 위치에 빠지게 만든다. 즉, 지도자를 분노시킬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체제는 중요한 위기에 대한 적응력이 심각하게 결여될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차피 모든 것을 잃고 생명까지 빼앗길 운명의 공통분모를 가진 엘리트들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김정은이 중·장기적인 권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어느 시점에서는 공포정치를 종식하는 한편, 유능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2인자 그룹을 확립해야 하는데, 역사적인 사례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은식 공포정치 속에서 가장 끝없는 불안과 공포에 직면해 있는 것은 어쩌면 김정은 자신인지도 모른다. ©KINU 2015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